
이명박 정부의 여가정책 개선방향

Leisure Policies of Lee Myung-Bak Government and Directions of the Policies for the Future

윤동철*, 이준희**, 이연주**
경성대학교 체육학과*,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Dong-Chul Yoon(5425ydc@hanmail.net)*, Joon-Hee Lee(jhl@star.ks.ac.kr)**,
Yeon-Ju Lee(sport-freeman@hanmail.net)**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이명박 정부의 여가정책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17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 및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 자료를 바탕으로 여가정책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첫째, 여가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둘째, 창의적 여가 스포츠 문화·콘텐츠 개발 정책 부족 셋째, 여가정책 개발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전무 등과 같이 세 가지가 도출되었다. 정책방향으로는 첫째, 여가에 대한 인식 전환 둘째, 창의적인 여가 스포츠 문화·콘텐츠 개발 풍토 조성 셋째, 여가정책개발을 위한 기반조성 등과 같이 세 가지가 도출되었다. 시대는 지속적으로 여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 만큼, 이명박 정부는 여가정책을 현재보다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중심어 : | 여가정책 | 체육정책 | 이명박 정부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leisure policies of Lee Myung-Bak government and to extract directions of the polices for the future. A report from task force team for undertaking the 17th presidency and 100 policies of the government were analyzed. As a result, three problems were extracted: lack of awareness for the needs of leisure policy; lack of policies for development of creative leisure culture and contents; none of any base project for leisure policy development. Three policy directions were extracted from the three problems: change of awareness of the leisure; building up creative leisure culture development atmosphere; making up base for leisure policy development. The time is changing steadily forward leisure life. Therefore, this government need to drive forward more advanced leisure policy than now.

■ keyword : | Leisure Policies | Sports Policies | Lee Myung-Bak Government |

I. 서론

2000년대 들어 우리 사회에는 객관적인 여가시간 증

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근로자들의 경우 법정 노동시간이 주 44시간이던 것이 2004년 7월부터 2011년까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실시하게 되었다(2003년 9월 15일 근로기준법 개정). 2004년 7월부터 공기업이나 금융보험업과 같은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기 시작하여, 현재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인 사업장에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다.

성인들에게 근로시간의 단축이라면, 학생들에게는 주5일 수업제를 들 수 있다. 교육부는 2005년 1학기부터 한 달에 한 차례씩 주5일 수업을 시작하였고, 2006년부터는 한 달에 두 차례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2011년부터 이 제도를 전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노인인구의 증가도 여가시간 증대에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어서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한국은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에 들어선 데 이어 2018년쯤 고령사회, 또 2026년쯤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9].

근로시간의 단축과 등교일수의 감소, 일자리 없는 노년인구의 증가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절대적인 여가시간의 증대를 경험하게 되었다. 증대된 여가시간은 그 활용 따라 우리 사회에 긍정적일 수도 있고 또한 부정적일 수도 있다.

국가는 일관된 여가정책을 통해 국민들이 여가를 긍정적으로 잘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여가는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각자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쓸 수 있는 자유시간에 각종 의무로부터 벗어난 자발적 활동을 통하여 즐거움이나 행복을 느끼는 것”으로 정의[1]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책은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적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있는 정부투자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방침”이라고 정의한다면, 여가정책은 “국민의 여가발전을 위한 여가행정의 행위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추진하기 위한 업무범위와 방향을 제시하는 시책”이라 할 수 있다[1].

지난 참여정부 시절 ‘여가시간의 증대’라는 새로운 사회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정부는 여가시간의 긍정적 활용을 위해 다양한 여가관련 정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

였다. 그 결과 청와대 내 정책기획 위원회의 여가문화위원회설치, 여가서비스 혁신방안 보고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내 여가정책실의 설치, (가칭)‘여가진흥법’의 추진, 지방자치단체 내 여가정책팀 신설, 여가백서 발간 등이 이루어졌다.

여가활성화 대책특별조직에서는 2003년에서 2005년까지 3년간에 걸쳐 시설확충부문에 여가시설 최소 기준 마련,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문화의 집, 다목적 캠핑장과 펜션, 농어촌 체험마을 조성과 활용에 대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운영부문으로는 청소년과 가족 프로그램, 주말 스포츠 캠프,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가족 여행 프로그램 확대 등이 제시되었다. 소외계층지원부문으로는 복지 관광, 농어촌 도서관 건립, 소외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등이 실시되었다. 전문인력양성부문에서는 농촌관광전문인력과 생활체육 지도자 양성과 배치, 공공문화 시설의 인턴채용사업이 실시되었고 제도 개선부문에서는 도박치유사업과 여행 바우처 제도, 지자체 여가담당관 지정제도가 실시되었다[5].

참여정부 임기 말기에 여가정책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여가를 국가정책의 구체적인 의제로 삼으려는 활발한 움직임[2]이 있었으나 정권의 교체로 잠시 소강상태에 있었다. 그러던 것이 최근 들어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정책국 내 문화정책과를 중심으로 여가정책을 다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2008년 10월 22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2008 여가정책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여기서는 여가정책을 위한 주제로 ‘창조적 행복사회를 설계합시다’가 선정되어, 여러 학자들이 여가정책의 당위성에 대한 논리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렇듯 여가정책의 확대 시행이 현대의 요구인 만큼, 본 연구자는 이명박 정부의 여가정책을 분석하여 추후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에 나타난 여가정책

1.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 기본틀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2월 25일 취임사에서 신성장

동력 확보와 외국투자유치 확대로 활기찬 성장과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를 최우선으로 살리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명확히 가려 효율적이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민간이 해야 할 일은 과감하게 민간에게 이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을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선진일류국가' 달성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당해 10월 7일 정부는 국가비전인 선진일류국가 달성을 위한 5대 국정지표 즉,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대국, 성숙한 세계국가 아래 20대 국정전략 및 100대 국정과제를 실천목표로 제시하였다[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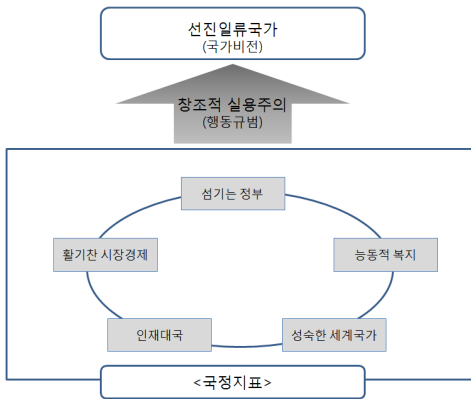


그림 1.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개념도(청와대[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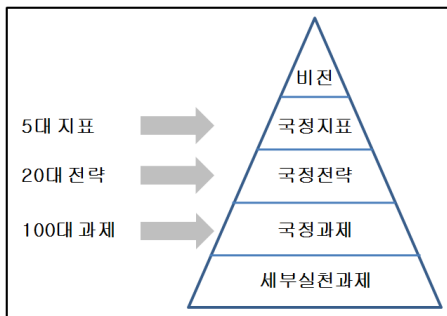


그림 2. 국정과제 기본틀

2. 국정과제에 나타난 여가정책

이하는 전체 100대 국정 과제 중 여가정책에 해당하는 과제만을 추출하여 제시한 내용이다. 추진시한의 '11하'는 2011년 하반기에 마무리 한다는 내용이고 주관기관은 해당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상위 범주에 속하는 '전략'과 '과제'는 하위의 세부 국정과제가 하나라도 해당되면 모두 제시하였다.

I. 섬기는 정부

과제명	추진시한	주관기관
전략4.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과제17. 깨끗한 물과 공기, 안전한 먹을거리를 보장하겠습니다.		
<2> 환경성 질환 예방 및 퇴치 ○ 놀이터 등 어린이 유해환경 개선	11하	환경부
과제18.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2> 근로자 평생 건강관리 강화 ○ 근로자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지원 강화	12하	노동부
과제19. 여성과 어린이가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1>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 아동안전지킴이 및 배움터 지킴이 확대	12하	공동 (복지,교과) 복지부
○ 방과후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지원	12하	

II. 활기찬 시장경제

과제명	추진시한	주관기관
전략5.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과제21. 성장의 밑바탕인 경제안정을 이루겠습니다.		
<2> 경성수지 안정화 방안 ○ 관광·교육·의료 등 고급서비스에 대한 획기적 규제 완화(해외수요 국내전환)	11하	지경부
전략7. 녹색성장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과제35. 녹색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3> 전국 생태 문화 탐방로 조성 ○ 생태문화탐방로 1,000km 조성	12하	환경부 (산림, 문화, 국토)
○ 생태공원, 비오톱 등 녹지공간 및 생태 자연시설 확충	12하	
○ 국토유형별 경관모델 개발, 생태마을 선정 등 경관창출사업 추진	12하	산림청 산림청
○ 산림휴양시설숲길 및 도시숲 확대	12하	
○ 숲가꾸기 사업을 통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12하	

전략8. 신성장동력과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을 키우겠습니다.		
과제37.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확실히 키우겠습니다.		
(3)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방안 ○ DMZ 주변지역 관광 패투어 추진 ○ 문화체육시설 규제 합리화	08상(완료) 08상(완료)	문화부 환경부
(4)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육성 ○ 유망서비스업종 육성	08하	지경부
(6)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 관광진흥기능의 민간주도 개편 ○ 관광산업에 대한 수출제조업 수준의 세제지원 및 규제완화	08하 12하	문화부 문화부
○ 외국인 관광객 1천만명 시대 실현	12하	문화부
○ 컨벤션 산업, 의료관광, 크루즈 관광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발굴, 육성	12하	문화부
○ 관광자원의 문화적환경적 품격 제고	12하	문화부
과제38. 방송통신융합을 촉진하고, 문화콘텐츠를 키우겠습니다.		
(3) 핵심 문화콘텐츠 집중 육성 및 투자확대 ○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정비 및 지역문화산업 육성	12하	문화부
○ 영화게임음악애니메이션방송영상 등 육성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확대	12하	문화부
○ 기확현장인력 양성 및 디지털콘텐츠 기술 개발	12하	문화부
○ 콘텐츠 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통한 글로벌 리더십 제고	12하	문화부
○ 민간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사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12하	문화부

III. 능동적 복지

과제명	추진시한	주관기관
전략9. 모든 국민을 위한 평생복지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과제44. 아프기 전에 국민 건강을 미리 지켜드리겠습니다.		
○ 건강서비스 시장 조성 및 바꾸어 신설 ○ 지역기금 및 건강증진재단 설립 ○ 만성질환 건강포인트 도입	10하 10하 11상	복지부 복지부 복지부
전략10.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과제47.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1) 저소득층 자녀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 드림스타트 사업 확대(시군구별 1개소씩 설치운영)	12상	복지부
과제48.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	12하	복지부
과제49.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 노인 1인 1여가 플러스 제도 도입	12하	문화부
과제50. 국가유공자가 존중받고,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1) 장애인 삶의 질 개선 ○ 기초자치단체별 장애인 복지관 설치	12하	복지부 (행안,재정)
전략11. 서민생활과 주거를 안정시키겠습니다.		
과제55. 농어가 소득을 늘리고, 농어촌의 거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2)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 농업인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보급	12하	농식품부 (농진청)
전략13. 학교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대하겠습니다.		
과제65.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미래교육공동체모임 운영 ○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강화체계 구축 ○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	09상 09상 12하	교과부 교과부 공동 (교과,문화)
전략14. 교육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과제67. 학력을 높이고 교육격차는 줄이겠습니다.		
○ 방과후학교 활성화	10하	교과부
과제68.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 학생건강지표 개발 및 건강관리정보 제공	09하	교과부
과제70. 평생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 지역사회와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	09상	교과부

IV. 성숙한 세계국가

과제명	추진시한	주관기관
전략20. 품격있고 존중받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과제97. 누구나 쉽게 문화·체육 생활을 누리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1)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 무료관람 전환	08하	문화부
(2) 체육단체 기능 개편 및 학교체육 활성화 ○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협의회, KOC 기능 조정 ○ 학교 잔디운동장 확충 및 체육보조장사 파견 ○ 국민 생활체육 활동의 활성화 지원(국민체육센터,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체육, 스포츠클럽 포함)	09하 12하 12하	문화부 문화부 문화부
(3) 일, 교육과 여가를 통합한 가능한 복지모델 개발 ○ 근린 문화시설 확충 -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화회관 등 건립 - 소외지역 유희시설 문화공간화 ○ 생애주기에 따른 대상별 맞춤형 여가문화 활동 콘텐츠 개발	12하 12하	문화부 문화부

김윤영 외[1]가 제시하는 여가정책의 3가지 핵심영역 ([표 1] 참조)을 바탕으로 볼 때, 다양한 여가정책이 정부의 여러 주무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여가정책은 18개 과제로 환경부,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산림청,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11개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다. 특이하게도, 여성을 대상으로한 여가정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성부에서 담당하는 여가정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표 1. 여가정책의 핵심영역(김윤영 외[1])

여가활동부문의 핵심영역	체육
	문화예술
	야외 레크리에이션
	관광
계층집단별 핵심영역	노인여가
	여가와 젠더
	청소년여가
	장애인여가
공급측면의 핵심영역	여가개발정책: 여가관련시설의 환경정비
	여가향유정책: 여가교육 프로그램 개발

이명박 정부출범 초기 여가정책은 단지 능동적 복지의 세부항목으로 “생산적 복지와 맞춤형 복지, 빈곤의 대물림 차단, 일·여가·교육을 3대 엔진으로 하는 복지, 고령화사회 대응”을 제시하면서 여가를 능동적 복지실현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 제시되어 있을 뿐, 세부적인 정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에는 순수여가 정책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하나는 “과제49.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의 “노인 1인 1여가 플러스 제도 도입”이고, 다른 하나는 “과제97. 누구나 쉽게 문화·체육 생활을 누리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의 “일, 교육과 여가를 통합한 가능한 복지모델 개발”이다. 이들 정책은 모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여 추진한다. 여가는 정권초기에 4대 국정지표 중 ‘능동적 복지’에 속해 있었으나 이번 발표에는 ‘성숙한 세계국가’에 속하게 되었다. 이는 여가의

수준을 복지의 차원을 넘어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의지로 해석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수위원회에서 정책[8]을 결정할 당시 사업추진이 구체화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정책논리의 적절한 위치를 찾지 못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체육정책은 “과제97. 누구나 쉽게 문화·체육 생활을 누리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의 “체육단체 기능 개편 및 학교체육 활성화” 사업의 하위 정책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과제와 동일하다([그림 3] 참조).

그 외의 정책과제들은 여가 및 체육 활동 참가를 위한 환경조성과 대상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각기 다른 주무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다.

3.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비전 및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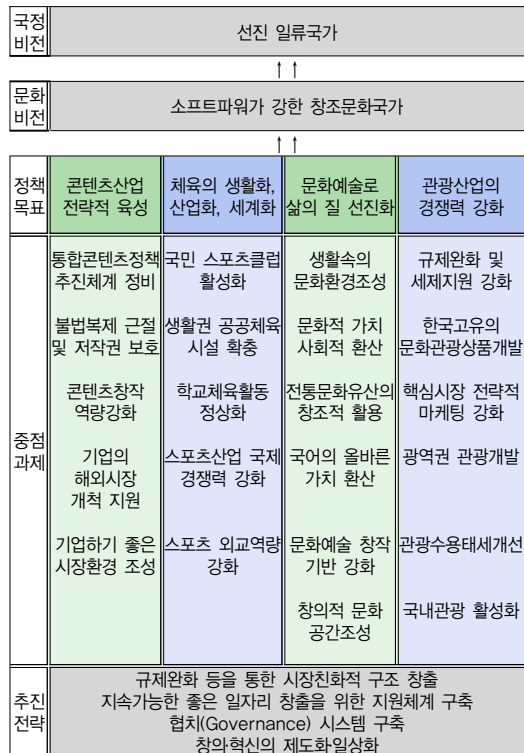


그림 3.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비전 및 추진전략

실질적으로 여가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

부는 국정비전인 ‘선진일류국가’ 달성을 위한 문화비전으로 ‘소프트파워가 강한 창조문화국가’를 내세우며 콘텐츠, 체육, 문화예술, 관광산업 등의 4가지 분야별로 세부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그림 3] 참조). 전체적인 추진 전략으로는 규제완화 등을 통한 시장친화적 구조 창출,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협치(Governance) 시스템 구축, 창의·혁신의 제도화·일상화를 제시하였다. 체육정책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정책들은 창의와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체육정책은 생활체육과 관련하여 스포츠클럽 활성화와 생활권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학교체육과 관련하여 학교체육활동 정상화를, 엘리트 체육과 관련하여 스포츠 외교역량 강화를, 마지막으로 스포츠산업과 관련하여 스포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주요 사업을 제시하였다[7].

III. 이명박 정부 여가정책의 문제점

1. 여가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대부분 일자리 창출과 직업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고, 복지와 관련된 정책전략 또한 가정 경제의 안정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행정부가 가장 큰 비중을 두는 것은 국가 경제의 활성화이기 때문에 정책결정에 있어 여가의 비중은 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다. 그렇지만 현정부는 열심히 일에 집중하는 사회보다는 일과 여가가 조화를 이루는 사회가 노동 생산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지난 참여정부는 여가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차원에서 국민여가활동을 활성화 시키고자 2003년에서 2005년까지 총리실내의 정부 13개 부처가 합동으로 ‘주 40시간 근무제 대비 여가문화 활성화 대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 협의체는 3년간에 걸친 활동을 통해 시설확충부문에 여가시설 최소 기준마련,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문화의 집, 다목적 캠퍼장과 펜션, 농어촌 체험마을 조성과 활용에 대한 정책을 실시하는 등 독립된 여가정책을 마련하였다.

현정부는 국가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새로운 여가정책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특히 국제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여가에 대한 정책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고 주5일 근무제와 주5일 수업제가 연기되거나 중단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경제 위기와는 관계없이 국민들의 자유재량 시간은 증가하고 있으나 가계수입 감소와 여가시설 및 프로그램은 부족한 현실에 국민들의 스트레스는 증가하여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오히려 국민경제가 어려울수록 국민들이 여가시간을 건전하고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정책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가는 여가정책을 통해 여성, 노인, 저소득층, 해외이주민, 장애인 등과 같은 소외계층의 여가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노동 생산성 증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소속감을 증대시켜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앞당길 수 있다.

2. 창의적 여가 스포츠 문화콘텐츠 개발 정책 부족

문화체육관광부의 4개 정책분야(콘텐츠, 체육, 문화예술, 관광) 중 체육정책을 제외한 3개 분야는 창작·창의적 문화·예술·관광 상품 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콘텐츠 창작역량 강화, 문화예술 창작기반 강화, 창의적 문화공간 조성, 한국고유의 문화관광상품 개발 등이 있다. 그러나 체육분야에서는 여가와 관련하여 스포츠클럽 활성화와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 사업들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할 뿐, 창작·창의적 여가스포츠 문화 개발과는 관련성이 약하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올바른 방향이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추진전략 즉, 규제완화 등을 통한 시장친화적 구조 창출,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협치(Governance) 시스템 구축, 창의·혁신의 제도화·일상화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창의적인 여가 스포츠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3. 여가정책개발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전무

현 정부의 여가정책은 참여정부를 비롯한 과거 정부

시기부터 진행되어 오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거나 단순히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번에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에 순수한 여가정책으로 두개 과제(국정과제 49, 97)가 선정되었는데, 이 또한 정책 과제가 만들어지고 선정되기까지는 지난 정부가 여가정책 개발을 위한 협의체를 만든다거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내에 여가정책실을 만드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기에 가능했다. 또한 참여정부는 (가칭)여가진흥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반해, 현 정부 출범이후 법제정을 위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의 여가시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새로운 여가정책이 개발될 수 있는 토대는 과거 정부수준에 머물러 있어 여가정책 개발을 위한 토대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IV. 정책방향

1. 여가에 대한 인식전환

현재 우리 사회는 여가사회로의 진입으로 일을 중시하던 가치관에서 개인의 생활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제는 국민들의 삶에서 일과 여가를 균형 있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동안 학계 및 일부 정부 관계자들에 의해 여가정책에 대한 당위성 논리가 제기되었고, 정책개발과 실행을 위한 기초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여가에 대한 욕구만 높을 뿐 여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효율적인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시스템도 아직 직장 중심, 일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사회는 어려서부터 체계적인 여가교육은 실시하지 않은 채, 좋은 직장을 얻고, 직업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모든 고통을 감수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국민들이 여가를 특정 여가활동으로만 인식(41.5%)하는 경향이 있으며, 여가의 기능 및 효용(4.4%)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이다. 기능 및 효용에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도 삶의 질 향상(24.8%)이나 자기개발(17.3%)에 응답한 사

람들보다는 기분전환(36.8%)이나 건강관리(21.1%)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다[6]. 여가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체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을 바꾸도록 정부 중심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여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체육정책 또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생활체육과 같은 아마추어 스포츠가 활성화된 이후에 우수한 경기력을 갖고 있는 참가자들이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소수의 엘리트 스포츠 선수를 집중 육성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10대 스포츠 강국에 들어간다. 현대 엘리트 선수들의 기량은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 있으나 생활체육의 기반은 매우 허약한 상태로 기형적인 체육체계를 갖고 있다. 그렇다 보니 체육정책에서도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을 분리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엘리트 체육은 국가이미지와 경쟁력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국정운영 목표로 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분리시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두 체육시스템을 하나로 묶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100대 국정과제에 체육조직개편과 스포츠클럽 활성화 사업이 포함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하겠다. 그렇지만 체육조직을 개편하는데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협의회, KOC의 단순한 기능 조정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들 세 조직을 하나의 개념체계 즉, 엘리트 체육이 생활체육의 최상위 단계에 위치하는 피라미드형 체계로 묶고 단일 단체명으로 통합한 이후에 3개의 단체가 그 하위에 존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국민들은 엘리트 체육이 있었기에 관람스포츠형 여가를 즐길 수 있으며, 엘리트 선수들의 활약은 국민생활체육의 저변확대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아마추어 스포츠를 근간으로 하여 생활체육과 학교체육, 그리고 엘리트 체육이 서로 공생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개념변화에 맞게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란 용어도 적절히 다른 용어로 변경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선진국형 체육시스템 정착을 위해 국가에서 추진 중

인 스포츠클럽활성화 사업은 참여정부 시기에 계획되어 추진하던 정책으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라 보기 어렵다. 단지 100대 국정과제에 선정되었을 뿐 확대되거나 수정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스포츠클럽의 조속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이 사업의 추진성과를 앞당겨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 지원에 의한 스포츠클럽만을 조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대기업 중심의 스포츠클럽 결성을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할만 하다.

2. 창의적인 여가 스포츠 문화콘텐츠 개발 풍토 조성

현 정부는 경제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는 만큼, 국민의 행복이나 복지증진을 위한 방법 또한 가정경제를 풍요롭게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소프트파워가 강한 창조문화국가와 창의·혁신의 제도화 일상화를 강조하고 있다. 지난 10월 22일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2008 여가정책 심포지엄'에서는 '창조적 행복사회' 구현을 위한 여가정책이 주제로 제시되었다. 이 자리에서 발표자들은 우리나라가 선진일류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창의력을 향상시켜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하는데, 이를 위한 방법으로 여가정책이 필수적이라는 주장들을 제기하였다.

우리는 공장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하여 벌어들인 외화를 해외관광이나 레저용품을 수입하는데 소비한다. 그 동안 우리는 우리만의 여가문화를 창출하지 못한 채 선진국의 여가활동을 그대로 답습해 왔다. 전통문화보다는 서구문화가 앞선 것이고 고급스러운 것이란 의식이 팽배해 있었다. 그러다 보니 골프나 요트와 같은 서구 여가문화를 따라하게 되고 그들이 앞서 개발한 골프용품이나 요트를 구입하기 위해 레저용품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매년 발간되는 여가백서에 레저스포츠 용품을 포함한 여가산업 관련용품에 관한 수출입 통계자료를 조사하여 발표할 필요가 있다. 이 자료를 통해 우리의 레저수지 적자를 줄이고 레저용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레저용품 수출을 위해 이제는 우리의 여가문화를 개발하고 해외에 전파

하여 관련 서비스 및 용품을 수출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여가문화 또한 세계를 선도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만들어진 창의적인 여가문화를 전략적으로 육성해 세계에 보급하고 관련된 여가산업을 확장시켜 나가야한다.

우리의 여가문화를 세계에 보급해야 글로벌 스탠더드 코리아를 달성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가 높은 여가서비스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 최근 한국의 비보이(B-Boy)들은 젊은이들의 춤추는 문화를 공연문화로까지 승화시켜 우리들의 비보이 문화를 세계에 전파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례는 탄탄한 사회시스템에서 나온 결과물이 아니라 소수 특수한 경우에 속한다. 마치 수영의 박태환이나 피겨 스케이팅의 김연아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우리의 창의적인 여가문화를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여가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스포츠의 경우 기존의 스포츠를 새로운 방법으로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신종 스포츠가 개발될 수 있는 사회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예를 들면, 배구와 축구가 결합되어 개발된 족구를 들 수 있다. 국가에서는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는 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사례에 대해 시범적으로 장소 및 시설을 지원하여 새로운 여가문화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3. 여가정책개발을 위한 기반조성

우리나라는 여가시간의 증대와 국민에 대한 여가교육의 부재로 인해 여가로 인한 사회문제가 증대되고 있으며, 선진국가로 발돋움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의 여가정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국내에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은 여가와 관련된 법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여가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법은 제정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여가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데 비효율적이다. 여가관련 정책이 하나의 여가정책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여가관련 법 (가칭)'여가진흥법' 제정이 필수적이다.

그 외에 여가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조직도 확대해야 한다. 현재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여가센터에서 여가관련연구를 수행 중에 있으나 수행과제의 내용과 밀도에 있어서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 따라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내 여가정책 연구조직의 확대, 예산지원, 인력보장 등의 추진이 필요하다[1]. 체육관련 여가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조직 및 연구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체육과학연구원 내에 여가정책을 담당하는 전문 연구원을 배치하여 여러 체육정책 개발을 돕고, 여가관련 체육정책 또한 새롭게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표 2. 여가관련 법(노용구 외[3])

여가권리	대한민국헌법, 아동복지법, 모자부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여가시간보장	근로기준법, 공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여가생활보장	평생교육법, 국민체육진흥법, 관광기본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자치법, 문화예술진흥법, 어촌어항법, 접경지역지원법,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여가공간	국토기본법, 도시개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산지관리법, 하천법, 수도법, 자연공원법, 산림법
여가산업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여가시설	과학관육성법, 지방문화원 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사회복지사업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운전법
여가활동 규제	윤락행위방지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현재 여가관련 단체를 통합하는 일 또한 여가정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여가정책과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외에 여가문화학회를 비롯한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 등의 여가학 관련 학회의 몇몇 연구자들만이 개별적으로 여가정책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 여가관련 단체는 수없이 많은 여가관련 자격증이 발급([표 3] 참조)될 만큼 많이 조직되어 있으나 이들을 통합하는 조직 즉, 여가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신력을 갖춘 단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영국의 경우 통합된 여가조직인 ISPAL(Institute for Sport, Park & Leisure)이 존재한다. ISPAL은 여가 및 복지 관리기구(ILAM: Institute of Leisure and

Amenity Management)와 NASD(National Association of Sports Development officers)가 통합된 조직으로 스포츠와 공원 및 여가산업의 전문가적인 몸체를 형성하고 있으며, 여가교육, 연구조사, 여가정보 및 정보와의 정책적 협의 등을 통하여 여가관리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1].

독일의 경우 여가관련 통합단체로 독일여가협회가 있다. 이 협회는 독일인 여가문화생활을 위한 전문단체로 독일뿐 아니라 유럽과 전세계의 조직과 전문가들이 연결되어 있다. 이 단체에서는 국민이 여가생활을 통해 건강하며 평준화된 삶, 활발하며 운택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단체가 주로 하는 일은 국민의 삶의 질을 고양시키기 위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 또는 후원하며, 세계의 여가관련 단체·기관·연구소와 연결해 여가경험·정책·프로그램 등을 교환하고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써 여가문화생활에 대한 연구나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며, 여가활동과 관련된 직업교육이나 연수, 그리고 여가교육과 여가상담을 담당하고 있다[1].

우리나라의 경우 2010춘천월드레저총회를 준비하면서 국내의 여가관련 학회들이 공동으로 학회를 열기 시작했다. 2009년 현재 5회째 춘천국제여가심포지엄이 개최되기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아직 이들 학회가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의 주제로 함께 모여 논문을 발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여가관련학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심포지엄에 참가하는 학회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 한국여가문화학회, 여가관광연구회, 동양사회사상학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사이코드라마소시오드라마학회 등 소수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는 학회뿐만 아니라 여가관련 협회 또한 무수히 많다. 다양한 협회는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각기 다른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표 3] 참조).

표 3. 여가관련 자격증 현황(김윤영 외[1])

여가활동	여가관련 자격증
사교적 여가활동	조주기능사, 제빵기능사, 제과기능사, 바리스타, 소믈리에, 다도교육지도사, 전통차예절지도사, 차치료사, 포크댄스지도사, 재즈댄스지도사, 모던댄스지도사, 라틴댄스스포츠지도사, 사교댄스지도사, 에어로빅스지도사, 스포츠댄스지도사, 레크리에이션최고전문지도사, 레크리에이션지도사, 전문진행자, 웃음치료사, 가요전문지도사 등
모방 및 놀이 활동	생활체육지도사, 경기지도사, 인라인강사, 스포츠경영관리사, 초경량비행장치조종,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노인운동지도사, 유아체육지도사, 수상인명구조, 래프팅가이드, 스킨스쿠버, 패러글라이딩지도사, 게임기획전문가,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분재전문관리사, 원예기능사, 자수기능사, 패세공기능사, 칠기기능사, 화훼장식기능사, 금속공예기능사, 도자기공예기능사, 석공예기능사, 인장공예기능사, 조화공예기능사, 종이접기마스터, 전통민예공예사, 조각천침선공예사, 플로리스트지도사, 풍선아트지도사, 폴리머클레이사범, 비즈공예지도사, 포장공예기능사, 선물포장전문가, 펠트공예, 한지공예사, 공예강사, 페이스페인터, 초크아트, 사진실기지도사 등
자기개발	펜글씨, 서예지도사, 스포츠바둑지도사, 독서지도사, 노인교육사, 스포츠마사지지도강사, 스포츠마사지사, 발마사지, 발마사지강사, 요가지도사, 바른체형지도사, 카이로프랙틱지도사, 체형간리사, 피부미용사, 두피관리사, आयुर्वेद매니저, 천연비누제조사, 천연화장품제조사, 향기관리사, 아로마테라피스트강사, 아로마테라피스트, 아로마테라피, 치료레크리에이션사, 음악치료사, 음악심리지도사, 놀이치료사, 미술심리상담사, 미술심리지도사, 드라마치료전문가, 역할극상담전문가, 웰빙건강지도사, 대체건강지도사, 대체건강관리사, 원예심리지도사, 국악실기지도사 등

우리나라도 영국이나 독일처럼 기존의 여가관련 단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연구활동은 물론 여가지도자 양성 및 교육, 여가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국가여가정책을 개발하여 정부에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 또한 현재와 같이 소수의 담당 공무원 및 연구원으로 어렵게 정책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군소 여가단체들을 연합체 방식으로 통합하여 공신력 있는 민간단체를 만들고 이 단체에서 정부의 여가정책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대한민국은 산업화시기를 넘어 후기산업화시기로 넘어가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 시기에 맞춰 이명박 정부는 국가비전을 '선진인류국가' 건설로 내세우고 있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 사회는 부가가치가 높은 창

의적인 상품을 개발하는 사회로의 전환되어야 한다. 창의적인 사회는 열심히 일한다고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사회구성원들이 여유 있는 여가생활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세상의 흐름을 읽을 때 남들보다 앞선 창의적인 사고가 만들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들의 창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재 분산되어 있는 정부의 여가정책 담당 기관을 일원화 하고, 여러 여가관련 민간단체들을 연합체 방식으로 통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1] 김윤영, 여가 그리고 정책: 여가를 통해 미래사회를 바라본다, 서울: 대왕사, 2008.
- [2] 노용구, “여가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0, pp.221-230, 2007.
- [3] 노용구, 여가학 총론, 서울: 레인보우북스, 2008.
- [4] 대한민국정부,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 청와대 홈페이지, 2008.
- [5] 문화관광부, 2006여가백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6.
- [6] 문화관광부, 2007여가백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 [7] <http://www.mcst.go.kr>
- [8] 제17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17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1, 청와대 홈페이지, 2008.
- [9] 조선일보 2008년 2월 16일자. “노인인구 늘어도 '네버 엔딩' 청년 취업난”.
- [10] <http://www.president.go.kr>

저 자 소 개

윤 동 철(Dong-Chul Yoon)

정회원



- 2009년 8월 : 경성대학교 체육대학원 박사 수료
- 2009년 8월 ~ 현재 : 동의대학교, 인재대학교, 경남정보대 출강

<관심분야> : 스포츠 경영 및 산업, 여가산업경영

이 준 희(Jun-Hee Lee)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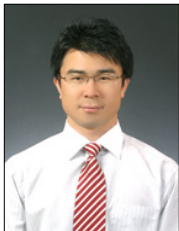


- 1991년 2월 : 동아대학교 체육학과(이학박사)
- 2009년 8월 ~ 현재 : 경성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관심분야> : 스포츠경영 및 산업, 여가산업경영

이 연 주(Yeon-Ju Lee)

정회원



- 2006년 8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학 박사
- 2009년 4월 ~ 현재 : 한림대학교, 서원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출강

<관심분야> : 여가·레크리에이션, 스포츠사회학, 여가산업경영